

# 이재명 대표 “삭감된 R&D 예산 복원”

### 스타트업 행사 찾아 민생행보 재개 각 업체 부스 돌며 애로사항 청취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스타트업 관련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행사를 찾았다.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제외하고 첫 외부행보다. 총선 민심의 향배를 가를 최대 이슈는 결국 민생이란 판단에 따라 민생고를 해결하는 대안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51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각 업체의 부스를 돌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업체 대표 등은 이 대표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막을 초지로 바꾸는 건 정부의 역할이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3% 성장을 회복해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의 삶도 개선될 것”이라며 “정치가 해야 가장 중요한 일이 희망을 만드는 일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먹고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서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는 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모태펀드 확충에 더 힘을 쏟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경쟁 요소가 있는 현안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무위원 탄핵,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국정조사 등을 두고 격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하며 당은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생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정책정당의 면모도 갖추어야 당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비명계 탈당 가능성 시사...이 대표 힘지 출마 요구도

### 조용천 “사당화에 질식해 죽을 지경” 이상민 “신당 합류 가능성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연일 공천 불이의 우려를 제기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비명 공천 학살’이 이뤄질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합류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조용천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탈당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며 “저는 민물고기로 답수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소금물이 돼 숨 쉴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후 당은 사당화의 길

로 계속 가고 있다”며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당 조직에 현 대표의 친위대를 자초하는 원의 조직이 생겨 그들이 다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거취 결정의 ‘마지노선’에 대해선 “12월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일 신당 합류와 관련해 “가능성은 어느 경우나 열려있다”면서 한 달 내 거취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전날 “도저히 민주당은 개선해낼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를 포함해서”라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힘지 출마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득권자의 힘지 출마로 가는 것이 맞다. 기득권자 중에 민주당의 가장 핵심은 이 대표”라며 “사당화 이야기를 듣는 이 대표가 먼저 힘

지 출마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 역시 여당의 ‘윤석열(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힘지 출마론’에 맞춰 지도부 힘지 출마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부터 힘지 출마를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며 “사병보고 나가라고 하면 되나. 장수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에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대선 의원을 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라. ‘친명 안방, 비명 힘지’로 방향을 잡았다간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명 주류 쪽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당론 결정

### 이동관 “野, 민심의 탄핵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위원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민 부위원장만 남은 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운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중대한 비위와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 “소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당 “공매도 금지는 총선 겨냥한 졸속 정책”

### 국힘 “개인투자자 고려한 조치”

여야는 9일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안한 금융시장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표심을 겨냥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속도를 높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다”며 “늦은 감은 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 난데없는 것 아니냐, 너무 오라카락이다, 갈팡질팡이다,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다, 너무 방향성

없는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의사 결정 때문에 시장이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며 “갑자기 일요일(5일)에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중단 결정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을 놓고 야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간 신경전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던 금융위가 지난 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고위 당정협의 때 (금융위가) 설득이 됐다고 한다. 누가 어떤 대단한 논리로 설득을 했길래 국회에서 그렇게 여러 위원들이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동의하지 않던 분이 입장을 바꾼 것이냐”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저희는 항상 공매도 금지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은 맞고, 시장조치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 국방부 “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 협의 중”

국방부는 9일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우리 군이 유엔사와 필요한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장성급 장교를 포함해 적정 인원과 직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사 참모장으로 한국군 소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정부가 유엔사에 참모 파견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기능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긴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던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모부 규모 확대를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